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 권고문」에 따른 일반사회과의 안(案)에 대한 성명서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 재구조화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능 기본 과목에 해당하는 일반선택 과목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진 회의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교육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력에도 시종일관 전체 연구진(도덕, 역사, 지리, 역사 모두 포함)의 합의안은 ‘일반선택 과목 감축 불가(현행 유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별로 성격이 각기 다른 일반선택과목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과목수를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사회탐구 영역과 연결되는 일반선택과목을 선정할 때,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에 대한 탐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고심 끝에 고교학점제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의를 위해 일반선택과목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과목수 축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단, 도덕, 지리, 역사과는 개정추진위원회 권고문 그대로 ‘교과별로 1과목씩 개발’(1:1:1:1)을 전체로만 감축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일반사회과는 ‘교과별로 1과목씩 감축’(1:1:1:2)하자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사회과의 안대로 결정되면 이는 개정추진위원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달리 특정 교과에 큰 특혜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각 교과는 일반선택과목을 줄이지 않아야 하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사회과의 안은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과 이기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회과만을 예외로 두자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사회과 측에서는 자신들의 과목이 민주시민교육의 주관 교과이거나 중핵 교과이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제적 접근이 일반사회과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2과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도덕과뿐만 아니라, 지리과, 역사과에서도 각각 강조되어왔으며, 이 세 교과 모두 학제적 접근을 강조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정의(正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사회과만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 권고문」에 예외를 두려고 시도하는 일반 사회과의 요구가 부당함을 알리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일반사회과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덕과는 물론이고 뜻을 같이하는 인근 교과들과 연대하여 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8월 31일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동양윤리교육학회, 전국 사대 윤리교육과 교수 협의회, 전국 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협의회,
전국도덕윤리과포럼, 도덕수업교육연구회, 경기도도덕윤리교과연구회,
경기도연천도덕윤리교과연구회, 전남중등도덕윤리교육연구회, 경북중등도덕윤리교과연구회,
세종도덕윤리교육연구회